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의 관심과 열기를 똑같이 국회로 돌려 보자

법조칼럼



김중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훈)

에서도 '국민청원' 형식으로 도입하는 추세다. 그렇다고 밝은 면만 있는 것일까. 우선 가장 핵심 조직인 청와대의 결단으로 얽힌 실태를 일거에 풀이 해치고자 하는 조급함이 묻어난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원수이지 왕조국가 왕이 아니다. 임기가 정해진 민선의 지도자에게 왕조국가 왕처럼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해 달라는 요구는 지나치다. 정부조직법, 국회법, 법원조직법 등 각종 법률에서 대통령 아닌 공무원에게도 권한과 책임을 맡겨 두고 있다.

윤창호법은 청와대청원보다는 국회가 먼저 나서야 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다면 국회가 법을 만들어 법을 조정하는 길이 우선이다. 윤창호사건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을 뜨겁게 달구었던 많은 사안은 대통령의 소관사항이라기 보다 국회의 권한과 책임인 사안이 많았다. 헌법이 서열상 최고규범이긴 하지만 헌법은 추상적이어서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이 국민 일상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국회나 국회의원보다는 대통령에게 기대려고 한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보이는 희망과 실망의 절반만이라도 국회의원에겐 권한에 비해 관심이 과도한 반면 국회의원에겐 권한에 비해 관심이 지나치게 적다. 청원을 규율하는 법률로 '청원법'이라는 법률이 있다. 기존의 청원법이 높아진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

지 못한다면 국회에서 청원법제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이제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도 새로운 변화를 고민 할 때가 됐다. 왕조시대 청원식 문제해결 방식보다는 국가운영시스템에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을 잘 대변해줄 수 있는 국회의원을 국회에 많이 보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반 시민들은 집이나 상가 소유자가 올려 달라는 월세를 제때에 마련할 수 있을지, 임금이나 퇴직금을 잘 받을 수 있을지가 윤창호법이나 조재범 코치 폭력문제보다 관심이 더 크다. 청와대 게시판을 통한 해결도 좋지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내게 맞는 법률을 제대로 만드는 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근로기준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긴밀히 연결된 법률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선출한 국회의원이 이들 법률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쯤 따져보아야 한다.

자신의 소득에 비해 월세가 지나치게 많음에도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은 국회의원이 있다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내가 납부한 세금으로 국회의원 세비를 지급하고 내가 군대 가서 고생해서 지킨 내나라 이기 때문이다.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으로 상징되는 대통령에게 보이는 관심, 희망, 실망을 나누어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어떤 활동을 하는 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정치의 발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이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와대 게시판을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다. 그것 자체로도 축복이다. 오랜 군부독재하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받아 온 아픈 역사가 떠오르기 때문이다. 참가자가 수가 20만이 넘으면 책임 있는 사람의 답변까지도 들을 수 있으니 세금 꼬박꼬박 내고 거기에다 군대 가서 고생고생 한 일반 국민에게 '나도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일이다.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의 총아로 예찬하기도 한다.

윤창호법이 제정되고 엘리트체제의 여두은 면을 바로잡는 계기가 된 조재범 코치 폭력사건 등이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의 힘을 보여준다. 지방자치단체

전일빌딩의 리모델링 현장에 서서

기고



류영국 지오시티(주) 대표·공학박사

은 노후한 대통령의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전당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당시 광주광역시에는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도청의 이전으로 도심공동화가 심화되고, 도시쇠퇴가 촉진되고 있었다. 이에 도심쇠퇴 기류를 차단하고 성장동력을 공급해 도시생태계를 문화적 기반으로 새롭게 조성한다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2007)까지 제정하였다. 10여년이 지난 현재로 보면, 문화산업을 토대로 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해당된다.

ACC는 국제현상 공모를 거쳐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규승 건축사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여 탄생되었다. 유규승씨의 작품은 3층 건물의 도청본관을 복원하고, 대부분의 시설을 지하에 배치하였다. 원형복원과 보존이 이루어질 도청본관에 민주평화교유원, 지하 신축건물에 어린이문화원, 문화정보원, 문화화조원, 예술극장 등 5개관을 설치하였다.

논리는 그러하다. 5·18사적인 도청 본관보다 낮게 건축물을 배치함으로써 5·18민주광장에서 무등산을 조망할 수 있고, 옥상녹화를 통해 도심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제공하며, 지하에서 빛을 쏘아 올려 밤에는 '빛의 숲'으로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구민들을 중심으로 518m의 타워설치를 포함한 고층화 주장과 지하의 ACC 건물로 들어가기 위한 주진입 경사로 공사에 의한 5·18사적 일부를 훼손하는 문제가 시민들간에 갈등은 심화되고 공사가 지연되는 등 상고의 아픔을 겪었다.

문제인 정부 들어 5·18사적지를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고 상부공간까지 포함 복원마스터 플랜이 수립되고 있다. 여기에 전일빌딩까지 가세하여 5·18 민주광장을 둘러싼 건축물들이 역사적 현장을 보존하면서 그 의미를 한층 되새기게 하고 있다.

전일빌딩은 호남언론의 메카였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어 신문 목포신보, 광주신보, 전남신보를 거쳐 8·15 해방이후에는 광주민보, 조선중보 등 혼란기에 이어 1950년에는 전남일보가 발간되었다. 호남신문 폐간에 이어 전남일보가 현재의 '금남로 1가 1번지'로 이전 통합하고, 현대식 고층건물인 전일회관이 1968년에 준공된 이래 1980년 7층 건물을 10층의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기까지 호남언론의 중심지였다.

서울퍼린 시절에도 '민주시민의 금지... 무등산은 알고 있다.'고 속으로 울부짖음을 사며며 계엄당국의 보도검열을 받았던 선배언론인들의 체취가 살아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5·18이후 전남도청 이전으로 도심이 쇠퇴하고, 낮은 층고와 낮은 조경과 냉·난방시설 등 건물의 노후화로 공실이 늘어났다. 이를 광주도시공사가 매입하여, 500여억원의 자금을 투자해 245발의 기층소사의 탄흔이 발견된 5·18사적지인 10층을 보존하면서 9층과 연결하여 5·18기념공간으로 활용한다. 지하1층부터 4층은 시민사랑방과 시민생활문화센터 등 시민공간으로 사용하고, 5-7층은 ACC와 관련된 콘텐츠 창조기업을 유치한다. 특히, 옥상은 무등산과 5·18민주광장, 금남로 등 광주도심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도심전망대로 활용한다.

베이비붐 세대인 7080에겐 당시의 5·18민주광장을 내려다 보며 밤이 지새도록 술잔을 기울였던 추억의 장소들이 많았다. 서로를 다독이며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던 따뜻한 공간들은 모두를 광장과 금남로의 뒤편으로 몰려나 아쉬움이 많다.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전일빌딩이 그날의 현장 보고, 옥상을 거닐며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 다짐을 새롭게 마음에 새기는 희망공간이자 ACC와 연계된 문화예술의 창조공간으로 꽃피어나길 간절히 기대해본다.

영화의 날씨. 눈 덮인 무등산이 저만치 보이고,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일빌딩 옥상에 서있다. 쉽게 볼 수 없는 옥상 가공식 현장이다.

국악인 서지연씨의 '어디로 갈까?' 국악가요를 개사한 '~ 피우지 못한 꽃 어디서 필까나 ~', 노랫말이 구성지게 울려 퍼지고 있다. 정·관계와 문화·예술단체 및 5·18 관계자, 리모델링공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포함 1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

여기가 어딘가? 금남로 1가 1번지. 80년 5월 '광장에 매아리친 민주'의 함성' 소리가 복원될 도청본관과 상부관을 휘돌아 금남로로 울려 퍼지게 한 모퉁이 건물이 아닌가! 그 피비린내 나는 절규와 외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목격자이자, 40여년을 무참하게 쓰야던 헬기 기총소사(機銃掃射)의 총탄을 고스란히 안고 응크리고 있었던 결정적 증인이 아닌가?

전일빌딩은 구 전남도청 자리에 들어선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때문에 가치가 부각되었다. 도청 부지는 김영삼 정부의 5·18기념공원 조성추진에 이

발언대

경찰의 뿌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찾다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적혀있다.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시작된 임시정부가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했다.

100년전 백범 김구선생은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으로서 대한민국 1호 민주경찰이었고 이후 1923년에는 의경대를 창설하여 젊은 의열 청년들의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경로가 되었으며 1932년에는 스스로 의경대장이 되어 독립투쟁을 이끌었다.

우리는 임시정부 경찰로 백범 김구선생만을 떠올

리지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인물이 무수히 많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는 지난해 4월 한국경찰 정신의 뿌리를 찾기위해 발족한 경찰청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추진 TF팀이 이뤄낸 개가로서 TF팀이 경찰청과 관련된 역사자료를 수집 분석해 임시정부 경찰은 현재까지 125명, 독립운동가 경찰은 31명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추가 발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양척식회사와 신산은행에 폭탄을

투척한 경무국원 나석주 의사, 일본 관동군 사령관에게 폭탄투척한 의경대원 유상근 의사, 신흥무관학교 출신 문형순 성산포경찰서장, 광복군 장교출신 장동식 제27대 치안국장, 안창호 의사 조카딸인 안백결 여자경찰서장 등 수많은 임시정부 경찰이 조국의 독립과 평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몸을 바치셨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신채호 선생의 말씀처럼 지속적인 문제인식과 역사고증을 통해 스스로 자정하고 민주, 인권, 민생경찰로 한걸음 더 나아가건단 신뢰받는 경찰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최병진(담양경찰서 중영파출소장)

시설

안정세 접어든 구제역, 안심할 때 아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잇따라 발생했던 구제역이 소강 상태를 보이며 안정세로 접어든 듯 하다. 지난 달 28일 경기도 안성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 확산 추세였으나 같은 달 31일 이후 20여일째 추가 발생이 없는데 따라서다. 그러나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보통 2~3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라 여겨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초기부터 긴급 대응에 들어가 '구제역 방역상황 일일 점검회의'를 열고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했다. 일시 이동금지명령을 시작으로 발생지역과 인접한 시도에 백신을 긴급 접종하는 한편 980만두 분량의 백신제조 외에 해외 수입사를 통한 추가 백신 확보로 확산에 대비했다.

아울러 전국 가축시장장을 일시 폐쇄하는가 하면 포유류 도축장 83곳 등지에 생석회 도포를 뿌리고 일일 거점마다 방역소소를 확대해 운영에 들어가는 등 '최고수준'의 방역단계를 유지해 나갔다. 농식품부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같은 농식품부의 대응은 내륙에서 유일한 구제역 청정지역이라할 전남권을 지키는 원동력이 됐다. 전남도는 구제역 발생 다음날인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수의사 등 182명의 인력을 동원해 소 53만3천마리, 돼지 110만마리 등 163만3천

마리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을 마쳤다. 또한 전남 지역 우제류 가축시장 15개소를 21일까지 3주간 폐쇄하고 폐쇄 기간 동안 가축시장 내외부, 주변 도로 등의 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우제류 확산농가의 모임을 금지하고 현장에서 긴급 방역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등 각별한 조치가 들어갔다. 구제역 차단을 위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차원에서다.

충주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가축들을 매몰 조치한 뒤 21일이 경과해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이상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구제역 대응은 사실상 종결된다고 볼 수 있다. 전국적으로 내려진 가축 이동제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25일께 해제되고 위기경보단계를 하향하는 등 평상시 방역 수준으로 이행될 전망이다.

전남도 관계자의 언급처럼 이번 구제역은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가 적기에 실시한 긴급 백신접종과 총동원 효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안정세로 접어든 계기가 됐다라고 본다. 예년처럼 초기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면 수많은 확산 농가가 피해를 입고 대량의 가축 살처분 등 후유증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구제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안정세라지만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유신잔재’ 논란 빛은 새마을장학금 폐지돼야

유신 독재시대의 잔재로 특히 논란을 빚어온 새마을장학금이 폐지될 예정이라고 한다. 광주시의 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9일 임시회 상임위 회의를 열어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결의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이 20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하면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된다.

새마을장학금은 오래 전부터 특정 단체에 특혜를 준다는 이유로 시민 사회단체가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던 터다.

광주시가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해 온 것은 유신 체제 말기인 1978년부터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2년 이상 활동한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었다. 이 같은 장학금 지급을 위해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조례에 근거해 시비 50%, 구비 50%로 재원을 마련해 왔다. 지급된 장학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새마을회 자녀 1인당 약 163만원 꼴이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 2017년 예산 1억800만원, 2018년 예산 2억5천만원이 지원됐다.

유신 말기인 1975년 당시 내무부 준칙에 의해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면서 전국으로 확대됐던 새마을장학금 폐지 여론이 일면서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새마을장학금 즉시 폐지 판정을 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도 올해 새마을장학금 예산을 전액삭감하고 광주

시의회는 이를 원안 가결할 바 있다.

광주시의회 등의 이같은 조치에 수혜대상자인 새마을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새마을회를 관련단체로 매도하고 새마을장학금을 적폐장학금이라 규정짓고 대안없이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했다는 것이다. 새마을회 회원들은 특히 논란 해소가 또 다른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의 반발로 지난 13일 예정됐던 광주시의회의 '광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폐기 조례안' 심사가 19일로 연기될 정도였다.

지방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도 유력한 유권자들이라 할 새마을회 회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새마을장학금의 토대가 된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주류다. 가난 퇴치와 경제 부흥이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사실상 유신 체제 유지를 위한 보상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 때문에 새마을회의 반발은 큰 공감을 얻지 못했다.

새마을장학금은 여타의 공적 장학금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데다 제도 운영이 시대의 흐름과도 맞지 않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조직 운영비와 장학금이 지방의회 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표'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면 선거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된다. 오랫동안 특히 시비에 노출돼온 새마을장학금 폐지는 마땅하다.

명태(明太)와 생태탕

“명천(明川)에 태(太)가리는 성을 지닌 어부가 있었는데 어떤 물고기를 낚아 주방 일을 맡아보는 관리로 하여금 도백(道伯)에게 바치게 하였던 바, 도백이 이를 아주 맛있게 먹고 그 이름을 물으니 모두 알지 못하였다. 다만 이 물고기는 태가라는 어부가 잡은 것이니 도백이 이를 명태(明太)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이 물고기가 아주 많이 잡혀 전국에 넘쳤고 이를 북어라고 부르게 되었다.”

조선 말기 문신 이유원(李裕元)의 ‘임하필기(林下筆記)’에 나와있는 명태의 유래다.

명태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생선이었다. 흔하니 흔했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많이 잡혔던 얘기다. 오죽했으면 ‘임하필기’에서 ‘아주 많이 잡혀 전국에 넘쳤고’라고 썼을까. 말 그대로 명태는 우리의 국민 생선이었다.

명태는 보통 몸 길이가 40~60cm 정도 되는바닷물고기로 정의된다.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명태는 체형이 길고 눈과 주둥이가 큰 냉수성 어류로 분류된다. 무리를 지어 서식하는데, 냉수성 어종인 탓에 우리나라 동해 이북에서 주로 잡혔다.

명태잡이가 가장 호황을 누렸던 건 1940년이었다. 당시 잡힌 양이 27만톤 이상이었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이후 줄기 했지만 1980년대엔 종중 연간 10만톤이 넘게 잡히기도 했다.

흔했던 탓에 명태는 국민 밥상 위에 한자리를 차지하며 서민들의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됐다. 말린 것은 황태로, 열린 것은 동태로 소중한

먹거리의 재료가 됐다. 어린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노가리로 불렸다. 건조시켜 보관했다가 꾸덕꾸덕하게 구워내 간장 소스 등을 곁들여 내놓으면 술안주로 그만이었다. 어린 명태였으므로, 찹자는 창난것으로 가공돼 밥상에 올랐다.

그 중에서도 열리지 않는 명태로 끓여낸 생태탕은 으뜸이었다. 비싸지 않으면서도 시원하고 얼큰한 맛 때문에 오랜 세월 대표적인 서민음식으로 자리잡아왔다. 특히 주머니가 넉넉지 않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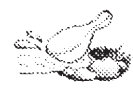
애주구들에겐 인기만점의 해장국이었던 것이다. 뜨끈한 국물로 잔잔한 밤 바가지 속 빼고 나면 온몸이 개운해지는 게 숙취로 상한 몸 쓰스리기엔 이만한 음식을 찾아보긴 쉽지 않았다.

이랬던 명태가 최근 귀해졌다. 어획량이 톱 떨어지면서 더이상 국민생선으로서의 자리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2007년 이후 어획량이 연간 1~2톤 정도로 급감하면서 정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의 명태잡이를 전면 금지하고 나선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최근 ‘생태탕 판매 금지’라는 헤드라인으로까지 이어졌다. 적발시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단서까지 달렸었다.

논란은 ‘국내산 생태에 한한다’는 정부의 후속발표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 헤드라인이 남긴 씁쓸한 뒷맛만큼은 쉬 가시지 않는다. 단순히 객체시각으로 치부하기엔 ‘국민 생선’ 명태의 위상 추락이 심상치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윤승한 사회부장 shyoon@srb.co.kr



약슈터

광주·전남 대표 정론지 무등일보 1988년 10월10일 창간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3(일간) 회장 조덕선 사장 발행·편집인 장인균 주필 김영태 편집국장 강동준 주소 (우) 61234 광주시 북구 제봉로 324(충효동 700-5) SRB미디어빌딩 5층 광고접수 (062)606-7772 FAX (062)383-8765 편집부 (062)606-7750 정취부 (062)606-7722 경제부 (062)606-7713 사회부 (062)606-7730 대표전화 (062) 606-7700 구독신청 (062)606-7776 문화체육부 (062)606-7737 사진부 (062)606-7762 뉴미디어부 (062)606-7760 사회복지부 (062)606-7730 지역사회부 (062)606-7723 서울지사 (02)313-1681 구독료 한달 10,000원·1부 5000원 | 독자재보 062-606-7730·FAX 062-606-8765 | E-mail mdlbo@srb.co.kr 홈페이지 http://www.mdlbo.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dmlbo7700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언제 어디서든 광주를 한눈에! 가장 빠른 광주뉴스 사방방 뉴스룸 무등일보·뉴스가 함께 만듭니다